

한나라, 한미 FTA 속도조절 선회 배경은

여야 '합의 처리' 관철 전략적 판단

예산안·핵심법안 처리 앞두고 전면전 부담 청와대 '연내 조기 비준' 입장 불변 재강조

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즉각적인 상정 및 처리'의 강경 입장에서 '여야 간의 합의 처리'로 선회하면서 '속도조절'의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략 부재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정기국회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한나라당을 둘러싼 정기국회 상황이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틀'을 짜는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핵심 법안의 처리를 버리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3대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저지태세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제 막 결을마를 땀 정기국회 초반부터 한미 FTA 문제로 전면전을 치르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FTA 문제로 여야관계가 얼어붙을 경우 당면 과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올스톱'되거나 야당과의 난타전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 '합의 처리'라는 유화책을 꺼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급 법안과 예산이 산적해 있는데 FTA를 일방 강행 처리하면 정말로 이번 정기국회가 어려워진다"고 말한 것도 맥이 닿아있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택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FTA 문제에서 일단 한걸음 물러섬으로써 예산안 및 법안 심사의 길을 터놓되, 국회 심의가 일정수준

진행될 경우 FTA 비준안, 예산안, 쟁점 법안 등의 '일괄 타결'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는 FTA 비준안을 예산안 등과 연계 처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또, 오바마 당선자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갈지자 행보'는 미국 차기 행정부를 이끌 버락 오바마 당선인 측의 한미 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즉, '국회 비준안 처리시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세웠지만, 비준안 처리 이후 미국의 재협상 요구시 한나라당은 책임론에 노출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부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조기비준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연내 조기 비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입묵동 기자 tuim@kwangju.co.kr



12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경제적 효과 및 보완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술인들이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 '반쪽' 공청회

민주당 불참...비준안 처리 시점·보완대책 따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 발효에 대비한 공청회를 열고 비준동의안의 처리시점과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하지만 민주당이 FTA 비준안 상정을 전제로 한 공청회라는 점에서 불참,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주의 모임만으로 진행돼 '반쪽' 공청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 진술인들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 차단을 위한 조기 비준을 강조한 쪽과 추가협상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엇갈렸고, 선

진창조모임 진술인은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협정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한나라당측 진술인인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미국이 FTA 협정문을 현행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비준은 미국의 추가협상의 요구를 사전 봉쇄하는 데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고 인학대 교수는 "미국이 한미동맹 틀에서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재협상 주장이 쉽지 않을 것이며 특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욱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한 찬성 기초 속에서 "오바마의 FTA 반대 입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 180도 바뀔 것으로 보는 것은 착각으로,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필연"이라며 "협정의 근거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양해각서 체결이나 정책선언을 통해 미측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는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창조모임측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쌀을 제외한 99% 품목 관세 철폐 ▲낙농제품 등의 세이프가드 제한 ▲도축기준 원산지 표시 등을 들어 한미 FTA를 '홀속'이라고 비판하며 "재협상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농업"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주, 한미 FTA '선 대책 후 비준' 압박

당 내부선 시기 조절론·비준 반대론 교차

민주당은 1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의 관련, 정부 여당에 '선(先)대책 후(後)비준'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강행처리 입장을 밝혔던 한나라당이 합의처리를 거론하면서 유화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기싸움에서 이긴 결과라고 보고 당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쓸데없는 강공 드라이브를 걸다가 갑자기 선회했다"며 "우나라가 정부·여당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야당법석을 떠는 불상사가 생겼다"고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심사한 것은 무효이고 18대 국회에서 새롭게 검토돼야 한다"며 국회내 별도 특위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외교장관 '선대책 후비준' 방침에 대해 단 일대모를 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이념과 정세성에 따라 크게 두 갈래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는 FTA 비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처리시기는 보완대책 마련이나 미국측 상황을 지켜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흐름이다.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태도를 볼 때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새로운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 나라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

이는 정 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親盧) 진영의 인식이고, 야권에선 자유선진당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다른 부류는 사실상 한미FTA에 부정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적극적인 재협상과도 분류된다. 천정배, 유선호, 김재연, 최인기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야권에선 민주노동당이 합세해 있다. 이들은 동意的 표결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두 갈래 흐름은 결국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점점 더 압박해줄 수록 당내 갈등의 소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현재 '종부세'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을 13일 오후 2시 대법판정에서 선고한다.

12일 현재에 따르면 선고 대상은 과세표준 합산 금액이 9억원(2005년 12월31일 개정된 현행법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6억원(현행법 3억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크게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도 물리는 점 ▲과도한 세율체계 등 3가지이다.

위헌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는 쟁점은 '세대 합산' 부분으로, 위헌론자들은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혼인한 부부나 세대원이 있는 자를 차별 취급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 종부세가 실제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인매다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로 원본 잠식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1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이들의 생존권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현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쌀 직불금 국조 '명단 미제출' 논란

국회 쌀소득보전 직불금심태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정부의 불발수령 의혹자 명단 미제출로 진문을 거듭하고 있다.

송광호 위원장과 한나라당 장운석, 민주당 최규선, 선진과 창조주의 모임 김창수 간사는 12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6개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초 1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직불금 불발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이 달 말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명단 제

출 없이 국조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0일부터 국조 일정에 돌입한 특위는 이날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직불금 국조가 초반부터 파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민주당 최규선 의원은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측 입장을 들었지만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명단 제출에 부정적"이라며 "민주당은 명단제출 전까지 절대 국정조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국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 시도"라면서 "특위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간담회에서는 정부측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소속인 송광호 위원장은 "이런 식이면 3당 원내대표들에게 명단이 올때까지 쉬었다가 진행한다고 건의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너무 원칙에만 치우치지 말고 경중을 가려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새롭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10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국비무료
 교육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25% 선착순 60명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은 1위 ●선배합격자반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다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 화정1점,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문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이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영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교육보험 환급과정 국비무료 **재강강기대**
 본원 ☎ 227-8003 전당포고 맞은편 3F
 원양점 ☎ 971-0002 (구)마포로 49길 48-1

= 지금도 지혜로운 많은 수험생들은 47년 전통의 무등을 찾고 있다 (청강한영) =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 직종 행정관공정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전호지방출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합격설명회, 매일09~19시까지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개강 11월 17일(주,아간반 포함)** (현재예약접수중)
 ●시험일자: 9급 국가직 4월 11일, 7급 7월 25일~시험 0,000명 7·9급 지방직 6월 하순 시험 ※09년 1월1일 이후부터 응시 신청 인원이 폐지된다.
 ◎ 6개월: 90만원 (교재 17만원 포함) ◎ 주·야간반+기초(英·國) 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신함.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